

재일한국인 · 조선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광현*

pkh@dongguk.edu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세 가지 국면과 ‘재일’ 사회
-분열 · 착시화 · 주변화 · 자이니치(在日)-
 - 2.1. ‘평양선언’ 이후
 - 2.2. 한류와 ‘재일’ 사회
 - 2.3. ‘자이니치’라는 용어와 시민성
- III. ‘재일’ 사회의 인구 구성으로 본 정체성
-기억 · 변용 · 의미 그리고 흔들리는 정체성-
- IV. 외국인 참정권과 ‘재일’, 그리고 일본의 국가정체성
- V. 결론을 대신하여

Abstract

この論文では 「在日」社会に関するいくつかのトピックと人口統計を通じて彼らの社会の「今日」と「記憶」という問題を考察した。最近、日本社会は「韓流」「北核」「参政権」などがイシュー化されるたびに、「在日」社会に対して多様な方式とレベルの議論が展開されている。そこに重要なのは、その議論が決して 「在日」社会だけに限ることではなく、日本の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と関わる議論として展開されている点にある。したがって、「在日」社会の問題は日本社会論の観点から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くに、この論文の3章では「在日」社会の人口統計の中、主に滞留資格の構成比率をもって彼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に関連して分析した。その統計に示されている滞留資格の分類方式は植民地記憶や「戦後処理」といった歴史性を含意するもので、また日本社会で在日外国人の代表として自己をアイデンティファイ(identify)してきた歴史を含蓄的にみせるものである。最近、1世代の人口が段々減少し歸化者の数も増えてきて 「在日」社会の人口變化は、彼らに植民地 「記憶」の變容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再構成を強いているだけではなく、日本社会での彼らの位相變化にも重要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そしてこの論文では、最近、在日外国人の問題と関連してもっとも大きくイシュー化されている参政権の問題について取り扱った。その議論の展開様相を述べ、またそれがもつ意味と問題点について考察した。人口統計を通じて 「在日」社会の日本内

* 동국대(서울)국어국문학과 조교수

の位相變化が顯著にもかかわらず、その參政權問題において一部の團體が在日韓國人・朝鮮人の問題として限らせ、反對運動を行っている。そういった國粹的態度の根拠は、やはり在日韓國人・朝鮮人の問題が人口統計上の減少趨勢にもかかわらず、まだ日本社會の國家アイデンティティと関連しては彼らの存在そのものが政治的にその比重と意味面において顯著に重視されているところにあるといえる。

Key Words : 재일한국인·조선인, 자이니치(在日), 참정권, 인구통계, 기억(Koreans in Japan, Zainichi, political rights, population statistics, memory)

I. 들어가며

기억이란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존재하는 행위 주체가 현재에 있어서 수행하는 선택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억이 ‘망각과 상기(想起)에 의한 재구성’이라는 불가결한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 하는 현실 세계에 대응하는 행위 주체의 가치 지향의 기준에 따르기 마련이기에, 그것을 두고 ‘기억의 정치학’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일(在日)한국인·조선인²⁾ 사회는 ‘국민’을 형성하는 집합적 기억에 의해 수시로 동화와 차별화를 강요받아오는 가운데도 소수자 집단(ethnic group)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해왔다. 어쩌면 그것은 지나한 기억의 투쟁이라고 불러 마땅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개의 재일한국인·조선인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한국인·조선인임을 느끼고

1) 石田雄, 『記憶と忘却の政治学』, 明石書店, 2000, 12쪽-14쪽 참조.

2) ‘한국인’이나, ‘조선인’이나 하는 호칭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 두 호칭 모두가 분단을 연상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재일코리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혈연적 측면을 강조해 ‘재일동포’라는 말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일한국인·조선인’이라 쓰기로 한다. 왜냐 하면 그 각각의 명칭이 조국과의 관계성이나 그들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가장 잘 표현한 용어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이 글의 논제에서처럼 ‘재일한국인·조선인 사회’를 가리킬 때는 편의상 이하 ‘재일’ 사회로 표기하고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의미가 함의된 것으로 독해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한 재일한국인의 “‘재일’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어는 조선을 가능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일본의 비정상성에 대한 영합·아첨이자 굴복일 뿐”이라는 치열한 비판에 동감하기 때문이다.(徐承, 『だれにも故郷はあるものだ』, 社会評論社, 2008. 17쪽) 또한 참정권 운동과 관련해 논하면서 ‘한국적’에 한정해 지칭할 때는 ‘재일한국인’이라고 표기하겠다.

의식하듯이, 그것은 일본 사회의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그 맥락 안에서의 관습 혹은 관심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고 가변적으로 표상(representation)되기 마련이다.

최근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 펴낸 『사진으로 보는 재일코리언의 100년-재일한인역사자료관도록(圖錄)』³⁾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 책은 우선 ‘100년’이라는 표제를 통해 한일 ‘합방’과 ‘재일’의 기원을 동일시함으로써 식민주의의 피해자로서 정체성을 표상하고 있다.(이 피해자로서의 표상은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저항의 표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 뿐 아니라, ‘재일 코리언’과 함께 ‘재일한인’이라는, 그들에게는 아직 생경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⁴⁾한다는 기호로서 ‘한인’이라는 용어를 표제로 이용해 ‘한국인’이나 ‘조선인’과 같이 그들 사회에서는 정파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를 지양함으로써 탈정파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의 표제는 자신들과 분단 조국과 사이의 동일과 차이를 동시에 함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적으로 그들의 가치 지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다. 즉, 과거 식민지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공생사회의 주체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자신들의 ‘오늘’을 재구성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재일’ 사회에 대해 ‘오늘’과 ‘기억’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최근 일본 사회는 한류, 북핵, 참정권 등이 이슈화될 때마다 ‘재일’ 사회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층위의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논의가 결코 ‘재일’ 사회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일한국인·조선인도 일본 사회 안에서 다양한 방

3) 在日韓人歴史資料館編, 『写真で見る在日コリアンの100年-在日韓人歴史資料館図録』, 明石書店, 2008. 이 책은 도쿄(東京)에 있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관장:강덕상)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700여점의 사진을 실고 각각에 간단한 해설을 부기한 도록이다. 이 책의 편자인 자료관은 민단의 지원으로 2005년 11월 24일에 도쿄에 개관되었다. 최근 이 자료관에서는 2009년에 오사카(大阪)나 나고야(名古屋)등 지방 대도시를 돌며 이 자료들의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4) 위의 책, 6쪽. 이 책의 발간사를 쓴 민단 단장 정진은 “자료관은 재일동포를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개인의 신조와 소속단체,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모으는 것, 즉 사료 중심의 입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설립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6쪽)라고 적고 있다.

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혹여 그들 스스로가 ‘흔들리는 정체성’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주체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강한 집착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은 일본 사회와의 관계나 조국과의 관계에 있어 ‘변용’하는 자기 표상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2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우선 세 가지의 토픽을 중심으로 일본사회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재일’ 사회의 인구 통계 중 주로 체류자격별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 문제에 관련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통계에서 체류자격의 분류 방식은 특히 식민지 기억이나 ‘전후 처리’라는 역사성을 함의하는 것이며, 또한 일본 사회에서 재일외국인의 대표로서 자기를 동일화(identify)해온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통계(statistics)란, 그 말 자체가 이미 ‘국가(state, staat)’라는 어휘와 밀접한 관련을 드러내고 있듯이” “특히 국가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기술한 것을 가리키는 말”⁵⁾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제시한 재일 외국인 관련 인구 통계는 단순히 그들의 정체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유관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세대가 점차 줄어가고 또 귀화자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재일’ 사회의 인구 변화는 그들에게 식민지 ‘기억’의 변용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일본 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상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찬반양론의 극한 대립 속에 ‘위헌’이나, ‘합헌’이나 하는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그 논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민단과 조총련은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 사회의 내부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 심각한 상호 반목과 대결이 조장될 소지도 있다. 4장에서는 그런 양상을 짚어보고 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그 문제와 관련해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5) 박명규·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5쪽.

II. 세 가지 국면과 ‘재일’ 사회

- 분열·착시화·주변화·자이니치(在日) -

해방 직전(1944년)의 통계에 따르면, 1,936,843명에 이르렀던 재일한국인·조선인이 1947년에는 598,507명으로 격감한다. 2년간에 걸쳐 140만 명에 가까운 재일한국인·조선인이 조국으로 귀환한 것이다.⁶⁾ 기본적으로 ‘(패)전후’ 일본의 ‘재일’ 사회는 그때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대개 그들은 망국과 종속, 유랑과 이산, 차별과 빈곤으로 점철되어온 가혹한 식민지 역사를 몸으로 기억해온 존재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 해방 이후에도 분단과 내전, 쿠데타와 독재, 민주화와 변영이라는 격변해온 조국의 현실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했던 존재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삶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주창한 ‘원격지 민족주의’라는 말로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는 조국을 그대로 삶 속에서 체화한 채 살아가는 존재인 동시에 민족적 소수자로서 식민본국이었던 일본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방 직후부터 60년간 지속되어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분열은 다름 아닌 민족 분단 현실의 재현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과거 식민본국이었던 일본에서 조국의 상황보다 더 실감나는 분단을 체험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들(혹은 그들 사회)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바로 조국의 분단 문제는 물론 ‘일본’의 국가정체성 문제, 그리고 한일·조일 관계 등을 문제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의 국면을 상정하여 ‘재일’ 사회가 직면한 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평양선언’ 이후

최근 일본 사회의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한 관심은 우선 북한과의 정치적 마찰에 따른 일본의 대응 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9년 들

6) 당시의 그것은 귀환을 보류한 ‘일시적 거류’로 해석하는 편이 옳을 듯싶다.(<http://mindan.org/toukei.php> 참조. 2009.12.30. 검색)

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고조된 반북 감정이 ‘재일’ 사회(특히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계열)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커다란 압박감을 주고 있다. 이 문제는 2002년 9월 17일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노골화하기 시작한 일본 내 반북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사회의 반북 감정은 인종주의(racism)의 형태를 띠면서 애꿎게도 그 분노의 화살이 재일한국인·조선인에게 향해졌다. 급기야 초충련 계열의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한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북한의 통칭인 ‘북조선’과 관련한 일본 국내의 보도가 ‘조선적(朝鮮籍)’과의 동일시를 조장한 측면과, 또 그로 인한 국민적 착시 현상에 기인한 측면도 많다. 그 한 예로서 최근 문부과학성이 국제과장(芝田政之)의 명의로 각급 국립연구소 및 대학에 의뢰한 공문의 내용을 보자.⁷⁾ “북조선적을 가진 연구자 및 학생과의 교류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공문은 외무성의 협조 요청에 따른 공문인 것으로 보아 문부과학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동시에 보내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 공문에서 표명한 ‘우려’처럼 일본 내에는 북한과의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조선적을 가진 연구자나 학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공문 행위는 대북한 ‘안보’ 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공문 안에 수차례 반복되어 있는 기표로서 “북조선적을 가진 자(재일조선인은 제외)”는 ‘북조선적(北朝鮮籍)’과 ‘조선적(朝鮮籍)’의 동일시라는 착시 효과를 오히려 조장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 무의식은 북한과의 관계가 정치적 현안으로 이슈화될 때 재일한국인·조선인(특히 ‘조선적’의 동포들)의 생활권에 깊숙이 관여하기 마련이다. 지난 9월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수립 이후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현안으로 이슈화되는 중에 일본의 우익 단체가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반북 감정

7) 7월 10일자 의 공문, 「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1874号を受けた北朝鮮籍を有する研究者及び学生との交流における不拡散上の留意点について(依頼)」(21文科際第6062号)

을 부추기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2. 한류와 ‘재일’ 사회

한편, 2003년부터 일본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일본 사회가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해 또 다른 방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를 제공했다. 한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왕래와 교환을 대폭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기존 부정적 이미지를 비롯해 수많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온 극적인 사회현상이었다.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한국인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단순히 고국에 대한 향수나 분리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현재 살고 있는 새로운 문화가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서 ‘재일성(在日性)’이라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런 터에 한류는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류 열풍 이후 한일 간의 문화 교류가 문화산업이나 교역의 거시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자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났다. 그로 인해 오히려 그들은 ‘가교’ 역할을 박탈당하거나 그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일본 사회에서 그들은 한류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교정될 기회는 얻었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표상하는(represent) 위치에서 소외되는 측면도 나타났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일본 사회 안에서 스스로가 자기 존재성을 강하게 언급해야만 하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를 껴안게 되었다.

가령, 윤손하가 출연한 일본 드라마 「파이팅 걸」(2001)과 「굿 럭!」(2003)이나 배용준이 출연한 일본판 「호텔리어」(2007) 등에서 그들의 배역은 ‘한국인’이다. 올해 고아라가 출연하여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드라마 「화려한 스파이」에서 그녀가 연기한 것도 ‘재일한국인’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한국 여배우)이었다. 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피와 뼈」(2005)나 「박치기」(2006)와 같은 영화 속에서 재일한국인·조선인은 주로 역사화된 과거의 존재로 그려졌다. 과

거 일본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프리즘으로 한국(혹은 북한)을 바라봤다면, 이제 는 한국(문화)을 표상하는 한류를 계기로 직접 한국 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의 시선은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삶을 탈역사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식민지시기의 ‘부(負)의 역사’를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던 ‘전후’ 일본 사회에서 본명(本名)을 감추고 통명(通名, = 일본명)으로 살았던 그들의 과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최근 그들은 다시금 주변화된 존재로 일상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3. ‘자이니치’라는 용어와 시민성

‘오늘’의 재일한국인·조선인들은 자기 존재 증명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공생사회’나 ‘재일’ 등과 같은 용어이다.

2005년에는 60년간 극단의 대립을 지속해온 민단과 조총련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급기야 ‘화해 선언’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끝내는 ‘화해 선언’이 완전 백지화되기는 했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두 단체 사이의 상호 불신의 벽도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일상에서는 균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일례로 2009년에 25회를 맞은 ‘원코리아 페스티벌’을 비롯해 재일한국인·조선인사회에서 제3의 운동이 활발해진 점을 들 수 있다. 6월 7일부터 도쿄(東京)에서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読売)오사카(大阪)본사, 마이니치(毎日), 산케이(産経) 등 주요 신문사들의 후원으로 개최된 페스티벌은 “재일코리아가 하나 되어 원코리아의 심벌이 되고 조국남북, 해외코리아의 허브 역할로서 원코리아의 실현에 공헌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민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시민의 창출을 위한 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한다”⁸⁾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그들은 ‘조선적’과 ‘한국적’을 넘어서는 아시아시민주의, 더 나아가서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공생’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자이니치(在日)’라는 용어도 시민성의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8) <http://hana.wwonekorea.com/mission/index.htm>(2009.12.30. 검색)

있다. 민단과 조총련에 구속되지 않은 시민성, 그것이 바로 ‘자이니치’라는 용어가 지닌 역사성과 정치성일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재일한다(在日する)’ 혹은 ‘재일을 산다(在日を生きる)’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⁹⁾ 남과 북, 민단과 조총련으로부터 이탈한 일부 학자와 문화인들이 고대 이래의 ‘도래인(渡來人)’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원을 찾고자 고안해낸 일견 ‘낭만적인’ 이 표현은, 어법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성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함의하고 있다.¹⁰⁾ 그들은 분단된 조국이나 일본 사회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속적인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며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상상해왔던 것이다. 최근 들어 이 용어는 일본 사회의 진단 척도로서 사용되는 등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자이니치’라는 용어는 일부 일본인 논자들(小熊英二 등) 사이에서 스스로를 ‘일계(日系)일본인’이라고 부르는 배경이 되기도 한 것이다. 세계 시민주의의 가치를 강조한 이 용어는 당장 과거 일본 내 인종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자이니치’의 삶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리고 ‘재일’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장소=내셔널리즘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대타적인 ‘일본인’이라는 발랄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그러한 상상력이 힘을 발휘할 때야 말로 바로 ‘일계 일본인’이라는 용어가 일본 사회에서 시민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9) 문학의 경우에 이 용어를 더욱 두드러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川村湊는 ‘재일조선인문학’이 ‘일본문학’의 정의를 사실상 흔들여 왔다고 파악하고, 실제 ‘일본문학’의 일부가 된 ‘재일조선인문학’에서 ‘재일문학’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 ‘재일하는 자’의 문학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생존의 장소 즉 그 ‘재일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보편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 岩波新書, 1995, 216쪽)

10) 재일한국인·조선인연구자인 이진희와 강재언이 공저한 『韓日交流史』(有斐閣, 1995)의 집필 의도와 책의 구성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사를 도래(渡來)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저서는, ‘고대조선과 야요이·고분시대’부터 시작해 마지막 장인 ‘재일(在日)은 산다’로 맺고 있다. 거기에서 마지막 장에서 의도하는 현재진행형의 관점과 도래사라는 저서의 관점이 결합한 것은 ‘재일’의 아이덴티티를 ‘도래인’ 역사의 연장에 두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남북한의 입장과 다른 ‘재일’의 입장을 스스로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와 궤를 같이 한다.(박광현, 『우리 안의 일본론』, 『일본학연구』, 단국대일본연구소, 2008, 315쪽, 참조)

Ⅲ. ‘재일’ 사회의 인구 구성으로 본 정체성

- 기억 · 변용 · 의미 그리고 흔들리는 정체성 -

2008년 10월에 『재일 1세의 기억(在日1世の記憶)』(集英社, 2008)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편자인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와 강상증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기획된 간행 프로젝트는 인터뷰어를 가능한 한 ‘재일’의 젊은 학생으로 기용하여 차세대 ‘재일’연구자를 육성한다는 별도의 목적도 겸한 것이었다. “‘전후/해방 후’를 살아남은 재일 1세 52명의 흔의 증언집”이라는 광고 카피의 이 책은, 말 그대로 다양한 삶을 살아온 재일 1세의 ‘라이프 히스토리’였다. 그 인터뷰 대상자들은 조선적, 한국적, 귀화자, 혼혈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BC급 전범, 활동가, 파칭코 가게 주인, 시인, 역사가 등 다양한 경험과 직종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재일’ 사회의 뿌리를 이루는 1세들의 ‘恨’ 어린 육성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할 만한 ‘오럴 히스토리(Oral history)’라고 할 수 있다.

‘재일’ 사회의 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 특히 그들의 굴곡의 역사를 그대로 체화해 살아온 1세의 경우 그 수의 격감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백만인의 신세타령(百万人の身世打鈴)』(東方出版, 1999)이나 『재일 1세의 기억』과 같은 기록은 민단이나 조총련과 같은 조직의 공적인 역사와 달리 생생한 육성 즉, “증인들의 보고”이자 ‘재일’의 상속자인 2세나 3세에게 전달될 체화된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¹¹⁾

그렇다면 우선 최근 몇 년간의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인구 구성을 주요 체류 자격별 통계를 통해 보고, 그 통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1) 그 외에도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2008년말(12. 25)발행의 『写真で見る在日コリアンの100年-在日韓人歴史資料館図録』(在日韓人歴史資料館編, 明石書店, 2008)은 의미 있는 자료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계1】 한국인·조선인의 체류 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수의 추이¹²⁾

체류자격 \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수	613,791	607,419	598,687	598,219	593,489	589,239
·						
·						
·						
영주자	39,807	42,960	45,184	47,679	49,914	
일본인의 배우자 등	21,285	21,083	21,837	22,429	22,340	
영주자의 배우자 등	2,891	2,767	2,656	2,652	2,661	
정주자	8,941	8,751	8,908	8,891	8,803	
특별영주자	471,756	461,460	447,805	438,974	426,207	

일본 쪽의 공식 통계에서는 ‘한국적’과 ‘조선적’의 인구수를 구분하지 않는다. 위의 통계에서는 우선 인구 총수의 확연한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영주자의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특별영주자란 1991년 11월 1일에 실시된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약칭, 입관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재류 자격, 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미국 전함 미즈리 선상에서 일본이 항복 문서에 조인한 날인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 일본 열도 안에 거주하던 평화조약국 이탈자 즉 식민지 출신의 주민과 그 자손을 일컫는다.¹³⁾ 이들에게는 입관특례법(入管特例法) 제9조에서 정하는 강제 퇴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주를 보장한다.

2007년까지 일본 내 전체 외국인의 최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영주자는 1950년대에만 해도 그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90%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12)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平成20년판). 2008년의 통계는 <http://www.moj.go.jp/PRESS/090710-1/090710-5.pdf>(21년판) 참조. 이하의 통계들은 기관의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해서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13)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平成三年五月十日法律第七十一号)最終改正:平成一六年六月二日法律第七三号. 이 제도는 구일본 제국의 식민지 출신자에게 자손대대로 일본에서 영주할 수 있게 만든 영주제도이다. 그 이전에는 ‘한국적’자는 1965년의 한일협정에 의해 영주권이 부여된 ‘협정 영주자’였고, ‘조선적’자는 1982년에 일본이 난민 조약에 가입하고 나서 난민 출신 영주 외국인과의 형평 차원에서 만든 ‘특례 영주’의 대상자였다.(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218쪽-219쪽, 참조)

수 자체가 감소해온 데다 다양한 목적으로 새롭게 일본에 온 외국인, 이른바 뉴커머(newcomer)의 증가로 특별영주자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큰 감소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 특별영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한국인·조선인이야말로 식민지의 역사와 분단사를 그대로 체화한 채 살아온 가족사를 가진 집단이다. 최근 사적인 가족사를 통해 역사 속의 개인, 개인과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담담히 성찰하여 베를린국제영화제 최우수 아시아영화상, 선댄스국제영화제(Sundance Film Festival)심사위원특별상 등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된 양영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디어 평양(Dear Pyongyang)』¹⁴⁾에서 그려냈던 가족사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은 2007년도에만 전년 대비 12,767명이 감소한 426,207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씩 줄고 있는 추세이다.¹⁵⁾ 그 이유는 대개 특별영주자에 해당하는 ‘재일’ 1세의 사망자 수가 늘고 있으며, 또 그 후손도 일본인과의 통혼율이 1990년부터 전체 결혼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일본의 국적법이 남녀양계주의(男女兩系主義)로 변경된 이래 신생아가 일본 국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위의 통계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체류자격은 영주자 집단이다. 영주자의 체류자격은 10년 이상 체류한 자(국가에의 공헌이 인정되면 5년 이상), 소행선량(素行善良)한 자,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자,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신원보증인이 있는 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들에게 부여한다. 이들은 입관특례법이 정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재일한국인·조선인으로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증가한 인구 이동의 결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다양한 직종의 뉴커머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향후에도 이들의 수는 특별영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본 내 외국인등록자의 전체 비율에서 최근 영주자의 비율이 매년 10% 이상 급격히 상승하는 점에서 보면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경우는 그 증가세가 미비

14) 이 영화는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와이드 앵글’ 부문 초청작으로 국내에도 공개된 바 있다.

15) 2007년 현재 일본 내 특별영주자의 전체 수는 430,220명이기 때문에 한국인·조선인의 구성 비율은 99.8%를 차지하고 있다.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439,757명(2007년 현재)에 이르는 영주자 중 한국인·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49,914명에 불과하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 전체 외국인 등록자의 수에서 중국인(타이완과 홍콩을 포함)이 606,889명(2007년 현재)으로 한국인(593,489명)을 초월할 정도로 중국인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과 동반하여 그들이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⁶⁾

영주권이 따로 없는 일본에서는 영주자와 더불어 정주자라는 체류자격이 있다.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경우 8,803명(2007년 현재)이 해당하는 정주자는 영주자와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구분하기도 까다롭다. 굳이 구분하자면 영주자가 Permanent Resident에 해당된다면 정주자는 Long Term Resident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주자란 법무대신이 인도상 및 그 외 특별한 사유를 고려한 위에 개별적으로 지정한 외국인에게 일본의 거주를 인정하는 체류자격이다. 대개 이른바 일본계 2세 및 3세, 일본인 자녀로서 출생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1년 이상 체류 기간을 허가받은 '정주자'의 배우자 등에게 부여하는 이 체류자격은 이후 영주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전체 외국인 중에서 정주자의 수는 세 번째로 많은 268,604명(2007년 현재)이다. 그중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비중은 3.3%에 불과한데, 이는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비율이 전체 외국인 중 두 번째 많은 27.6%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증가 추세는 향후 재일외국인의 국가별 점유 비율의 추이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국적(출신지)별 영주허가 건수의 추이'를 통해 현 시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또 향후 추이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16) 2008년 현재 중국인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655,377명으로 전체 2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한국인·조선인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589,239명으로 나타났다.(<http://www.moj.go.jp/PRESS/090710-1/090710-5.pdf>)

【통계2】 국적(출신지)별 영주허가 건수의 추이¹⁷⁾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	46,171	48,263	39,256	51,538	60,506
중국	13,987	14,855	11,404	13,744	15,875
브라질	10,894	10,789	10,026	16,055	19,793
필리핀	6,972	7,563	6,044	7,554	8,723
한국·조선	3,345	3,671	2,939	3,368	3,788
페루	3,381	3,275	2,449	2,878	3,241
그 외	7,592	8,110	6,394	7,939	9,089

2003년에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인 46,171명이었는데, 신규 입국 외국인의 증가와 체류의 장기화, 정착화, 영주허가의 조건 완화 등에 따라 2004년에는 48,263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 다소 감소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역대 최고인 60,506명이 되었다. 그 중 두드러진 점은 브라질이나 페루 출신 외국인의 증가 추세이다. 특히 재일외국인의 총수에서 브라질 출신은 316,967명(2007년 현재)으로 중국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1990년 6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 이래 일본계 2세, 3세 및 그 가족에 대해서 3년간 체제가 가능해지면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브라질의 경우는 1908년 이후 일본인의 이민을 받아들여 지금은 150만 명 정도의 일본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과 2008년 현재의 국가별 외국인등록자 수의 차이가 그 추이의 확연한 양상을 보여준다.

【통계3】 국적(출신지)별 외국인등록자의 증가율¹⁸⁾

국적 \ 연도	1989(비율)	2008(비율)	증가율
한국	681,838(69%)	589,239(26.6%)	-14%
중국	137,499(14%)	655,377(29.6%)	477%
브라질	14,582(15%)	312,582(14.1%)	2,143%
필리핀	38,925(4%)	210,617(9.5%)	541%

17) <http://www.moj.go.jp/NYUKAN/nyukan78-2.pdf>

18) <http://www.moj.go.jp/NYUKAN/nyukan78-2.pdf>/<http://www.moj.go.jp/PRESS/090710-1/090710-3.pdf>

페루	4,121(0.4%)	59,723(2.7%)	1,449%
총수	984,455(100%)	2,217,426(100%)	225%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어갈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다문화공생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이미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외국인 동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도 외국인 범죄나 차별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더불어 그들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점차 일본 내 외국인의 문제는 곧 국가정체성과 깊이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1989년 만 하더라도 전체 외국인 등록자 중 69%나 차지했던 재일한국인·조선인이 2008년 현재 26.6%로 격감했고 그 증가율도 1989년 대비 -14%를 기록하는 등 일본 사회 내에서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들어섰다. 이러한 통계로만 보자면 과거 ‘자이니치(在日)’라고 하면 재일한국인·조선인이 대표하던 시대가 지났음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식민지 역사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온 일본 내의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위치, 즉 재일한국인·조선인 문제의 특수성이 점차 희석화되어가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들어서 외국인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참정권 문제는 이제까지 재일도인(특히 민단체열)이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에 대해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거나 반복 감정과 연계하는 착시화의 선전 방식을 취하고 있는 태도는 아직까지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문제가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외국인 문제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미 앞서 언급한 영화 「디어 평양」은 평범하지 않은 ‘재일’의 가족사에 대한 내밀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 제주도 출신으로 15살에 일본에서 해방을 맞은 뒤 조총련 간부로 살아온 아버지와 조총련계 민족학교에서 교육 받은 딸 사이의 대화로 주로 진행되는 서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세대의 문제이다. 이 영화에서 세대문제는 고향=조국, 세계와 개인, 일본 사회와 ‘나’ 등의 문제를 둘러싼 부녀 사이의 갈등을 통해 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1971년에 ‘귀국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가 살아가는 세 오빠의 가족이다. 1959년에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 사이에 ‘재일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래 1984년까지 9만 명이 넘게 ‘귀국’했던 일행 중에는 사춘기의 세 오빠가 포함되어 있었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가 “북조선으로의 추방(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이 ‘귀국운동’은 <지금-여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자,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이기도 했다.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가족사에서 세 오빠의 삶은 격한 대립의 소재로서 서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주인공의 삶과 갈등을 지배하는 요소로 위치한다.

영화 속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세대 문제는 아버지의 양보로, 즉 딸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소되지만(그렇다고 해서 감독이자 딸인 양영희가 한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흔들리는 ‘재일한국인·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 양상은 주로 국적 선택을 둘러싸고 외현되는데, 스스로를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가시화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물론 이들은 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 집단이다.

【통계4】 일본에서의 귀화허가신청자 수의 추이¹⁹⁾

연도\사항	귀화허가신청자수 (명)	귀화허가자수(명)				불허가자수 (不許可者数)
		총계	한국인·조선인	중국인	그 외	
2003년	17,633	15,666	11,778	4,722	1,133	150
2004년	16,790	16,336	11,031	4,122	1,183	148
2005년	14,666	15,251	9,689	4,427	1,135	166
2006년	15,340	14,108	8,531	4,347	1,230	255
2007년	16,107	14,680	8,546	4,740	1,394	260
2008년	15,440	13,218	7,412	4,322	1,484	269

위의 표에서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2004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2003년과 2004년에 귀화자가

19) 日本法務省民事局平成20年版「出入国管理」日本語版「資料編」(<http://www.moj.go.jp/NYUK-AN/nyukan78.html>)

전년도에 대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재일한국인·조선인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비율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귀화허가자의 총수 비율에서 60%를 조금 상회하는(1999년 현재, 16,120명의 귀화자 중 10,059명) 1999년 통계 이후 2003년(75%)과 2004년(67%)을 제외하면 줄곧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예외적인 후자의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쪽 통계를 통해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통계5】 국가별 국적 이탈자 및 상실자 수의 추이(일본의 경우)²⁰⁾

연도\사항	이탈자	상실자	총계
2003년	17	18,871	18,888
2004년	33	10,727	10,760
2005년	33	9,908	9,941
2006년	29	8,843	8,872
2007년	30	7,999	8,029
2008년	11	7,458	7,469

이탈자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경우 그 수가 미국과 같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탈자/상실자가 760명/5,796명(2003)→1,301명/7,591명(2004)→2,707명/8,129명(2005)→563명/7,633명(2006)→592명/8,541명(2007)→236명/7,671명(2008)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실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이중국적 정리)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서 규정한 국적상실의 사유가 생겨,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을 지칭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모두 보더라도 2003년과 2004년에 국적 이탈자 및 상실자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 또는 예외적으로 많

20) <http://www.immigration.go.kr/HP/IMM/newsimg/statistics/statistics2008.pdf>(2008년도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5년 5월 24일부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05년 법 시행 이전에 국적 이탈자/상실자가 급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후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 들어서는 특별영주자의 귀화보다 영주자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2003년과 2004년에 귀화자 수의 급증이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영주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편승해 귀화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귀화자들은 일반적으로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자손의 욕망 실현을 위하여 귀화했을 터이다. 하지만 거꾸로 귀화자는 스스로가 한국인·조선인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실에 구속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민단이 향후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조총련계의 동포를 하루라도 빨리 각성시키는” 일을 제시하는 것처럼, 민단 쪽에서는 조총련계나 ‘조선적’의 ‘동포’를 포섭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배제하지 않는다. 단, 많은 통계에서 귀화자는 배제한다.²¹⁾ 그것은 귀화를 민족적 의리를 지키지 못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통념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통계와는 달리 가령 ‘원코리아 페스티벌’의 주최 측의 입장처럼, 최근 들어서는 일상 혹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한국계(혹은 조선계)일본인’의 존재를 단순히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도 현저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이니치’라고 하면 재일한국인·조선인이 대표하거나 식민지 역사의 연장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수성을 강조하던 경향은 점차 희석화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사실 2009년에 들어 재일외국

21) 그 대표적인 예가 아래의 실질 증감을 제시한 민단의 통계인데, 이 통계처럼 실질 감소의 인구에 귀화자는 사망자와 똑같이 취급되어 계산된다.

【통계】 연도별 자연증감·실질증감(<http://www.mindan.org/toukei.php>, 2009.12.30. 검색)

연도	출생	사망	증가	귀화자	실질증감
2003년	2,206명	4,526명	-2,320명	11,778명	-14,098명
2004년	2,103명	4,446명	-2,343명	11,031명	-13,374명
2005년	1,876명	4,660명	-2,784명	9,689명	-12,473명
2006년	1,792명	4,588명	-2,796명	8,531명	-11,327명

인 문제에 있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지금까지 재일한국인이 주도한 전사(前史)가 있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만 본다면) 이젠 결코 그들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참정권 부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 내 반복 감정을 부추기고 그것과 연계시키려는 연상 및 착시 효과를 이용해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수적 자세의 근거는 역시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문제가 인구 통계상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관련해 그들 존재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 비중과 의미 면에서 현저하게 중요하게 여겨진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외국인 참정권과 ‘재일’, 그리고 일본의 국가정체성

지난 8월에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였다. 그 이후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1995년에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한국인이 가장 활발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²²⁾ 2008년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숫자는 91만 명으로서 일본 전체 인구인 1억 2천만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중 절반 정도를 특별영주자가 다수인 재일한국인·조선인이 차지한다. 이 문제가 유독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 정부에 이미 여러 차례 참정권을 요구했으며,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간사장이나 오카다 가즈야(岡田克也) 외무상 등 민주당 내 실세들도 지금은 립서비스 차원을 넘어 공공연하게 참정권 부여를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 내 리더 중 한 명인 오카다의 경우는 ‘영주외국인 법적 지위 향상 추진 의원연맹’의 회장이

22) 민단의 입장은 줄곧 참정권 문제 해결가 “전후 처리 청산의 일환”으로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최영호, 「재일 동포는 선거권이 없다」, 한일민족문제학회 위임, 앞의 책, 37쪽, 참조)

기도 하다. 하토야마 수상이 고문으로 있기도 한 동(同)의원연맹이 2008년에 작성한 제안서에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 선거권을 부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도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니 영주자는 귀화해 국적을 취득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찬반양론의 심각한 갈등을 보이며 일부 과격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0월 말에는 “외국인에게 일본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하는 반대파의 한 청년이 도쿄의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의 컴퓨터를 부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반대파의 시위가 과격화되자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 현정권 실세인 오자와 간사장에게 일임할 것을 결정하고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준비토록 했다. 하지만 2009년 예산위원회의 제출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이 법안을 둘러싼 일본 내 정세로 고려할 때 2010년이나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²³⁾

현재 준비 중인 이 법안은 ‘국교가 있는 국가나 그에 준하는 지역’의 출신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과거 식민지 조선 출신자나 그 자손이라도 ‘한국적’이 아닌 ‘조선적’의 사람들은 대상 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외국인 참정권은 민단이 중심이 되어 정계와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오랜 동안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민단장 등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실세들을 접촉해 왔다. 그에 비해 조총련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후 보상과 국교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이 법안에서 ‘조선적’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재일’ 사회의 분명한 균열과 일본 내 반복 감정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3) 2009년 12월 12일에 한국을 방문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국민대의 강연에서 재일한국인 참정권과 관련해 언급하며 정부입법을 통한 법안 제출이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 국회 때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2월 현재,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의 반대와 연립정권 내 국민신당의 반대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로부터 권한을 일임 받은 오자와가 정치자금 문제로 곤경에 빠진 것도 그러한 흐름을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의 중앙 일간지, 특히 한겨레신문은 “일 민주, 외국인 참정권 ‘조선적’ 배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이 기사는 “식민시대 고려 않은 이중 차별”이라는 원코리아 페스티벌의 집행위원장 정갑수의 말을 인용해 기사화하면서 민주당이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한국적’을 취득하는 ‘조선적’의 ‘재일동포’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²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 ‘재일’ 사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이 ‘재일’ 사회 내부의 문제로 취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내의 논쟁에서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인 외국인 참정권을 저지하는 국민의 모임’ 등의 단체들은 “국민의 주권, 존립,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의 주장도 일본 사회의 국제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주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공생 사회를 지향하며 사회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본 내 찬반양론이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귀납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재일’ 사회의 분열 양상은 문제시되지 않을 소지가 역력하다. 하토야마 정권은 일본 내 반복 여론과 정서를 의식한 방향에서 이를 입법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준비 중인 대로 참정권 부여 대상에서 ‘조선적’은 배제될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이렇게 ‘재일’ 사회를 ‘한국적’이나 ‘조선적’이나 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대응하는 방식은 한편에서는 식민지 기억을 소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 통치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하토야마 정권의 수립과 함께 한일 정부는 서틀외교를 복원하며 북핵 문제

24)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11일자.

등 대북관련 현안들에 대한 공조를 강조했다. 하토야마 수상은 동아시아 중시의 '우애 정치'를 표방하며 부임 후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심지어 내년 중에는 일본 내 반복 정서의 정도나 변화에 따라서 대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이제까지 일본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내치(內治)'의 문제에 줄곧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재일' 사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009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한 민주당의 오자와 간사장이 일본 국민으로서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사죄하면서 영주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현실화'할 것임을 언급했듯이 한일 간의 '오늘'의 문제는 결코 과거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9년 말 지지(時事)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내각이 실행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낀다'는 국민이 1978년부터 조사한 이래 최고인 63.1%였다고 한다. 강제 '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의 두 나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과연 어떻게 정책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주목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안은 바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재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정부 입법이 과연 국회통과가 가능할지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재일' 사회에 대해 동화와 차별이라는 분할 정책의 기초를 지속할 경우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나뉜 역사성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 '재일' 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재일' 사회에 대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심각화할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조선적'의 동포 사회에도 문호를 개방해왔다. 2004년에 정부(외교부)가 국가인권위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모든 조선적(朝鮮籍)동포에게 여행증명서 신청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중략)… 지난 5년간 여행증명서 발급실적은 1만1819건이며 그 동안 총 4건의 거부 사례가 있었고 거부한 사유는 간첩사건 연루, 친북활동 등"이었다.²⁵⁾ 그러나 한국 정부(영사관)가 최근 '조선

25)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선적(朝鮮籍)동포의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건(2009.07.15)'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14조, 제19조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외교통상부 장관 및 주일 오사카 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조치' 결정을 내렸다. 1)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받

적’ 동포에게 입국 비자(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과거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부가 ‘재일’ 사회에 대해 취해온 ‘기민(棄民)정책’을 ‘조선적’ 동포에 한정해 다시금 실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최근 한국 정부가 ‘재일’ 사회에 대해 취해온 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정권 부여라는 일본 정부의 선의도 반드시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적’과 ‘조선적’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재일’ 사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할 지배 정책은 한편에서는 식민지 기억을 소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 통치를 재현하는 기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세대가 점차 줄어가고 또 귀화자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나타난 ‘재일’ 사회의 인구 변화는 그들에게 식민지 ‘기억’의 변용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일본 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상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 ‘재일’ 사회가 참정권을 획득한다면 그로 인해 정치적 위상이 급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 그것은 한일, 조일 관계에서 아직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을 일시적으로 덮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하토야마 정권의 출범을 두고 ‘재일’ 사회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http://mindan.org/toukei.php>

<http://hana.wwonekorea.com/mission/index.htm>

<http://www.moj.go.jp/PRESS/h21.html>

<http://www.moj.go.jp/NYUKAN>

<http://www.immigration.go.kr>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37쪽/218쪽-219쪽
박명규·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급할 때 국적 전환을 강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주일 오사카 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003, 5쪽

박광현 「‘우리’ 안의 일본론」, 『일본학연구』23, 단국대일본연구소, 2008, 315쪽

李進熙·姜在彦 『韓日交流史』, 有斐閣, 1995

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 岩波新書, 1995, 216쪽

『百万人の身世打鈴』編輯委員 編, 『百万人の身世打鈴』, 東方出版, 1999, 7쪽-10쪽

石田雄 『記憶と忘却の政治学』, 明石書店, 2000, 12쪽-14쪽

徐承 『だれにも故郷はあるものだ』, 社会評論社, 2008, 17쪽

小熊英二·姜尚中 편 『在日1世の記憶』, 集英社, 2008, 4쪽-7쪽/774쪽-780쪽

在日韓人歴史資料館編 『写真で見る在日コリアンの100年-在日韓人歴史資料館図録』, 明石書店, 2008, 6쪽